

‘탈원전 현실화’...전력 대란 우려 vs 전력 수급 영향 없어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원전 중단으로 차질 예상 원전 1만1600MW 2029년까지 22%의 예비율을 확보한다는 정부 계획 달성기 어려워 경제성장률 둔화 등 전력 수요 예측치 과도...‘전력대란 우려 없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규 원전 추진은 물론 이미 건설 중인 원전까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기존의 전력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전력 대란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가동이 중단되거나 잠정 보류된 원전은 신고리 5·6호기(각 1400MW·메가와트)와 신한울 3·4호기(각 1400MW), 천지 1·2호기(각 1500MW) 등 총 6기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른 상태지만 정부가 공사 추진에 대

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일시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설계용역이 됐고 천지 1·2호기도 사실상 잠정 중단 상태다.

이외에도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1500M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까지 포함하면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설비용량은 1만1600MW로 늘어난다. 이는 2029년에 정부가 계획한 원전 발전량(3만8329MW)의 30.2%에 달하는 수치다.

당장은 원전 건설 중단이 전력 수급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지만 신고리 5호기가 전력 수급에 반영되는 2021년 3월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 예비율 15%에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7%)을 감안해 2029년까지 22%의 예비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부족한 전력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해 해마다 신재생 설비를 3700MW씩 보급한다는 것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80%까지 올리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입부가 '제7차 전력기본수급 계획(2015~2029년)'에서 2029년 피크기여도 기준 전원구상비를 신재생의 경우 4.0%로 전망한 것도 이같은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크기여도는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에 기여하는 비중을 말한다.

다만 전력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전력 대란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처럼 경제 성장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지 못함에 따라 산업용 전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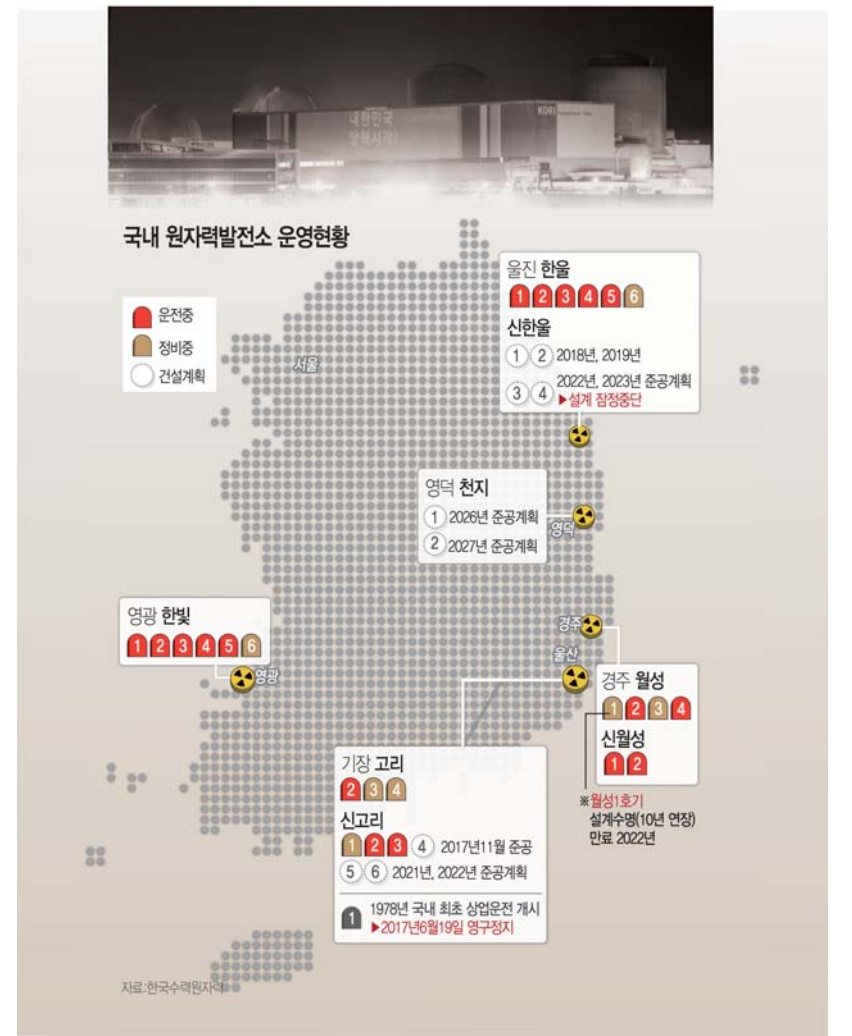
실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전력소비 증가율을 각각 2.9%, 3.4%로 예상했으나 소비는 1.8%, 0.0% 증가에 그쳤다.

7차 계획에서도 전력 수요 예측의 근간이 되는 성장률 전망치가 2015년 3.3%로 실제 기록한 2.8%보다 0.5%포인트나 높았다.

정부는 전력 수급 대책을 반영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와대 관계자는 지난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수급 대책 없이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 8차 전력수급계획을 공개해 국민들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탈(脫) 원전’ 정책 드라이브에 원전업계 반발 ‘확산’



원전 5·6호기 조감도

새 정부가 ‘탈(脫) 원전’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원전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가동이 중단되거나 잠정 보류된

원전은 신고리 5·6호기(각 1400MW·메가와트)와 신한울 3·4호기(각 1400MW), 천지 1·2호기(각 1500MW) 등 총 6기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른

상태지만 정부가 공사 추진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일시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설계용역이 됐고 천지 1·2호기도 사실상 잠정 중단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국내 원자력발전 설비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산중공업 등과 2~3차 협력사들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는 반응이다. 매출에 막대한 타격이 빚어지는 등 피해규모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발전 부문 매출이 총 매출액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대금 2조3000억원 중 이미 받은 1조1000여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기해야할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식시장에서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탈 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연일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30일 마감한 주

건설중단 조치에 관련업계 ‘마른 하늘에 날벼락’

해외수출도 막대한 차질 예상...업계 정책 제고 호소

식시장에서는 전날보다 200원 하락한 2만9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원전 사업이 2~3개 대기업을 필두로 수 많은 하청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원전 공사 중단 결정으로 하청업체도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방향에 적극 동조한다”면서도 “원전 재검토 기초에 대해 재고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원전이 40년간 안전한 운영을 통해 값싸고 친환경 전력 에너지를 공급해왔으며, 국가 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세계적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업체가 원전 중단으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상실할 가능성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기술은 불거풀처럼 사라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된다”며 “영국과 체코 등 동유럽을 비롯한 각국에 대한 수출 기회는 불거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원전업계 일각에서는 노후 원전은 영구 정지를 하는 한편 신규 원전 공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이른바 ‘원전 스위프’ 정책 추진을 통해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스

지역구감, 미래창조, 전문직필

湖南新聞 전한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